삼정 KPMG

Business Focus

2026 미국 중간선거: Blue Wave 이후, 미국 정책과 한국 산업



November 2026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ents

Ⅰ.	2026 미국 중간선거 Overview	1
Ⅱ.	의회 권력구도 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 향방	5
Ⅲ.	국내 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15
Ⅳ.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및 시사점	24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2026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며 의회 주도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이동. 분점정부[1](Divided Government) 구도 아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이 변화하고, 특히 입법이 필요한 정책의 추진 제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숫자로 보는 2026 중간선거

35석
상원 선거 대상 (약 3분의 1)

218석
하원 과반 확보 기준 (435석 전원 선거 대상)

3석 · 4석
하원·상원 다수당 전환에 필요한 민주당 순증 의석

상·하원별 의석 현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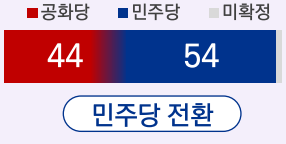
상원 (총 100석)

선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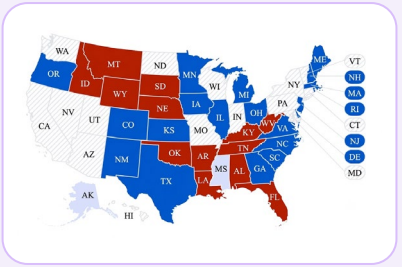


공화당 다수

선거 후



민주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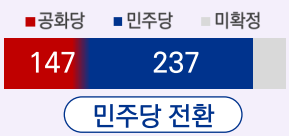
하원 (총 435석)

선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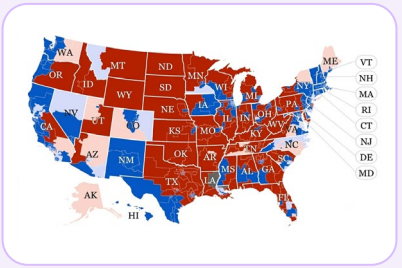


공화당 다수

선거 후



민주당 전환



※ 기타는 무소속 1석, 공석 2석

선거 결과 및 주요 시사점

01 의회 주도권의 변화
상·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며 의회 권력구도 재편

02 행정부 견제 및 감독 강화
분점정부 전환에 따라 의회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부의 정책 집행 부담 확대

03 정책별 추진 여건 차별화
행정권 기반 정책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의회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추진 제약 확대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1: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는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정치 구도를 말함
Note2: 선거 결과 및 의석 현황은 2026.11.05 오전 8시 14분(한국시간) 기준 개표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미국 중간선거, 주요 이변의 순간들

공화당 우세 주를 포함한 곳곳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이어지며 의회 주도권이 이동함. 거물급 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낙선하고 조지아 주지사직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며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보여줌.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와 최초의 무슬림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등 역사적 순간도 잇따름

민주당 승리를 이끈 주요 인물들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 상원 당선	•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을 꺾고 당선 • 1988년 이후 처음으로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승리
	애덤 해밀턴 캔자스 상원 당선	• 공화당 로저 마셜 현직 의원을 꺾고 의석을 민주당으로 돌림 • 캔자스 연방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932년 이후 처음으로 승리
	애니 앤드루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당선	• 주지사 임명으로 상원에 오른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 달린 그레이엄을 꺾은 이변임 • 민주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선거 승리는 1998년 이후 28년 만임
	셰러드 브라운 오하이오 상원 당선	•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전 오하이오 부지사로, 밴스 부통령 후임으로 의석을 넘겨받은 존 허스티드 현직 의원을 꺾음 •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두 자릿수 격차로 이긴 주에서 나온 승리
	트로이 잭슨 메인 상원 당선	• 전 메인주 상원의장 출신으로, 5선 현직 수전 콜린스를 꺾음 • 민주당이 수십 년간 노려온 콜린스의 30년 가까운 재임을 마감시킴
	조시 투렉 아이오와 상원 당선	•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3선 연방 하원의원 애슐리 힌슨을 꺾고 의석을 가져옴 •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한 중서부 보수 강세 지역에서의 승리
	압둘 엘사이드 미시간 상원 당선	•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7선 전직 하원의원 마이크 로저스를 꺾고, 미국 상원 최초의 무슬림 의원이 됨
	키샤 랜스 보텀스 조지아 주지사 당선	•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억만장자 기업인 릭 잭슨을 꺾고 당선 •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조지아 주지사직을 차지함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주요 인사 발언으로 본 2026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으나, 주요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의회와의 대립 가능성을 남김. 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주요 공약의 이행을 강조했으며, 공화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좌절감을 표하면서도 2028년 대선과 함께 의회 다수당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전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 우리는 민주당과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 다만 **내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었다면 압도적 승리**를 거뒀을 것이다.

그들이 비상식적인 법안을 보낸다면 나는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될 것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우리는 온갖 역경을 딛고 승리를 거뒀다. 미국 국민에게 다섯 단어로 말하겠다. **구제책이 오고 있다(Relief is on the way)**"

"미국 국민들이 붉은 벽(공화당 장벽)을 무너뜨렸으며, 이번 결과는 상원 지형을 바꾼 세대적 변화다. **국민들은 변화를 선택했고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실천할 차례**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

"선거 결과에 실망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단 한 번의 선거 결과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며, 더욱 힘을 낼 것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두 배로 힘을 쏟을 것(We double down)이며, 상식적인 비전을 밀고 나가 **2028년 대선과 함께 하원을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Ⅰ.	2026 미국 중간선거 Overview	1
Ⅱ.	**의회 권력구도 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 향방**	**5**
Ⅲ.	국내 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15
Ⅳ.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및 시사점	24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단 몇 석 차이로 인한 다수당 교체의 의미

다수당 교체는 행정부 감독, 주요 인사 인준, 예산·재정 결정 및 입법·정책 주도권 등 의회 권한의 행사 방향을 바꾸며, 이에 따라 행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도 달라짐. 다만 대통령의 독자적 행정권, 거부권 및 기존 법률·제도 등은 다수당 교체만으로 바뀌지 않아, 의회 구도 변화가 실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음

다수당 교체에 따른 의회 권한 행사의 변화 및 한계

영향이 큰 영역

다수당 교체로 의회의 권한 행사 방향과 정책 추진 우선순위 및 강도의 변화

01 행정부 감독

행정부·연방기관 조사, 청문회 및 정책 집행 감독, 탄핵소추	• 조사·청문회 대상 및 방향 변화 • 행정부 정책 집행 관련 감시·견제 강도 변화

02 주요 인사 인준

장관, 연방법관 등 대통령 지명 주요 고위직의 상원 인준	• 인준 심사, 표결 방향, 처리 속도에 영향력 확대 • 행정부 인사 구성 및 정책 추진 환경에 영향 (하원만 교체될 경우 영향 제한적)

03 예산·재정 결정

연방 예산 편성 및 세제 관련 법안의 심의·의결	• 예산·세제 우선순위 및 지출·재원 배분 변화 • 예산 지연·셧다운 및 부채한도 협상에 영향

04 입법·정책 주도권

법안의 심사·표결, 상임위원회 의제 설정 및 정책 우선순위 결정	• 법안 처리 우선순위, 심사 방향 변화 •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력 변화

영향이 제한적인 영역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과 법적 절차로 인해 다수당 교체만으로는 실제 정책 전환에 한계

01 대통령의 독자적 행정권

행정명령·규제 등 행정부가 법적 권한 범위 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 통상·이민 등 대통령 권한 기반 정책은 다수당 교체와 별개로 지속 • 다만 법률상 권한 범위, 예산, 사법 판단 등의 제약에 따라 추진 범위는 제한

02 법률 제정 절차

의회 통과 법안도 대통령 서명, 거부권 행사 등 후속 절차 필요	• 다수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 제한 가능 • 거부권 무효화에는 양원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단순 다수만으로는 한계

03 기존 법률·제도

이미 법제화된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유지되는 정부의 의무·집행 체계	• 다수당 교체만으로는 기존 정책이나 법률이 폐지·변경되지는 않음 • 정책 전환에는 법 개정, 예산 조정, 행정 조치 등이 필요

Sour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U.S. Senat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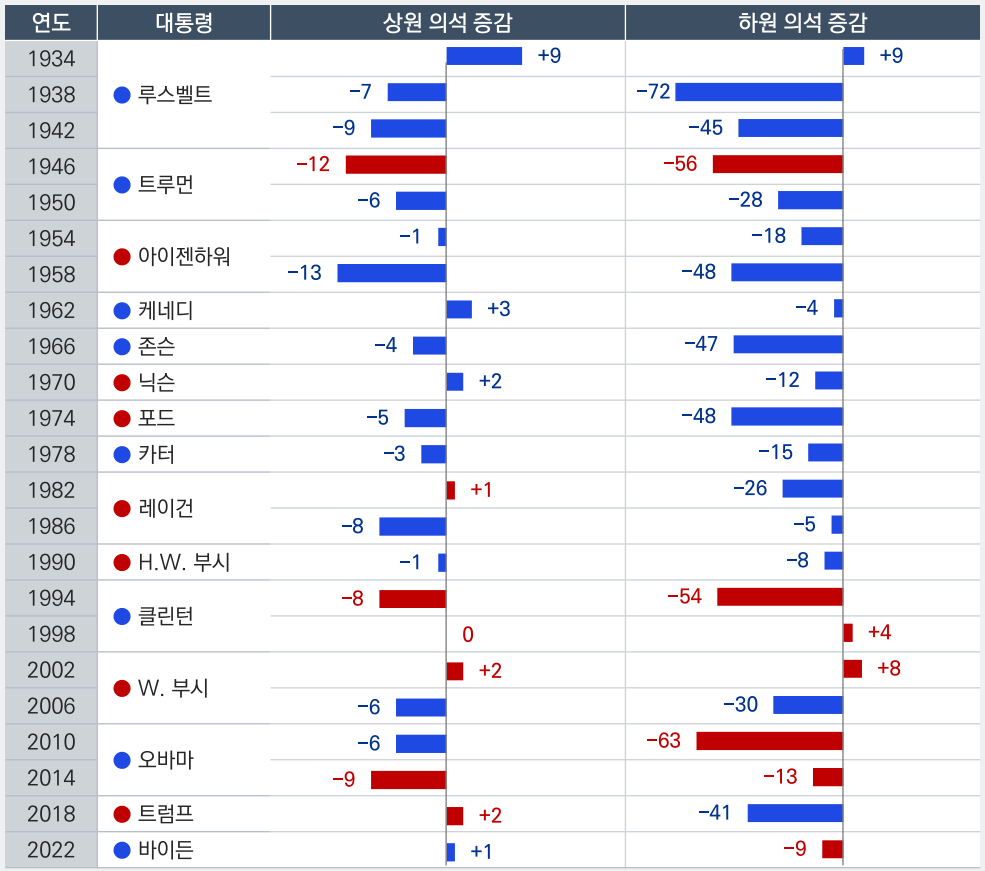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참고] 역대 미국 중간선거 사례로 본 의회의 권한 변화

역대 미국 중간선거 결과(1934~2022년)

[집권당 의석 증감 및 선거 후 다수당]



Source: U.S. Senat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merican Presidency Project,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점(●)은 대통령 소속당, 상·하원 막대 길이= 집권당 의석의 증감, 막대 색=선거 후 다수당 표시

Case Study

Case1. 의회가 법안을 주도해도, 최종 관문은 대통령 거부권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상원	하원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

- **최저임금 인상 | 입법·정책 주도권**
  - 2006년 중간선거 후,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법안 추진
  - 2007년 연방법 개정으로 연방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확정
  - → 다수당 교체로 의회의 입법 의제 및 정책 우선순위 변화
- **아동 건강보험 확대 | 법률 제정 절차(대통령 거부권 행사)**
  - 민주당 주도 의회가 아동 건강보험 확대 법안 추진
  - 부시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 후 의회 재의결 무산
  - → 의회 다수당 입법 추진에도 대통령 거부권 등 추가 절차가 변수

Case2. 하원의 행정부 견제력 확대에도, 집권당 다수인 상원에서 제동

2018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상원	하원
	공화당	공화당	민주당

- **트럼프 탄핵소추 | 행정부 감독 강화**
  - 2019년 12월,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2020년 2월, 상원에서 유죄 평결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 미달로 무죄 평결
  - → 하원 다수당 교체로 탄핵소추는 가능했으나, 최종 파면 여부는 상원 의석 구도에 좌우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다수당 교체로 달라지는 4가지 주요 정책환경

의회 다수당 변화에 따라 관세·세제·규제·정부지원 등 주요 정책환경이 달라짐. 관세·규제 등 행정권 기반 정책은 다수당 교체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세제·예산·입법 등 의회 의존도가 높은 정책은 의회 구도에 따라 추진 여건이 크게 좌우됨

4가지 주요 정책환경의 의회 의존도 및 R·D·D 시나리오 진단

정책환경	현행 제도 및 의회 의존도		중간선거 이후 주요 정책 환경 변화
관세	• IEEPA 관세 위헌 판결(2026.2.20) 이후 301조(불공정무역)·232조(안보)·338조(차별대우) 등을 근거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행사** • 122조 관세(상한 15%·150일)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아 2026.7.24 만료 • 관세를 제한하는 입법은 가능하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실현이 어려움**	낮음	• 기존 관세 체계 유지(301·232조 중심) • IEEPA 관세 환급은 법원 절차로 진행 • 행정부 권한을 통한 통상 압력 강화 가능성
세제	• 주요 세율·세액공제 변경 및 신규 세제지원 도입은 **법률 개정 필요** • 세제 개편 및 예산조정은 대통령 서명 등 입법 절차 필요 • 개별 일몰 조항의 연장·변경은 입법 없으면 자동 만료	높음	• OBBBA 감세·세액공제 제도는 현행 유지 • 기업 세제 혜택 범위는 재무부·IRS 시행 세칙이 좌우 • 증세·IRA 복원 논의 등은 차기 대선 주요 쟁점으로 부상 가능
규제	• 연방 규제 완화·인허가 간소화는 **행정부 및 규제기관 권한으로 상당 부분 추진** 가능 •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개혁**(인허가법·AI 연방 선점·가상자산법 등)은 **의회 입법 필요**	낮음~보통	• 규제 완화 방향은 유지, 의회의 조사·소환으로 속도 둔화 가능 • 약가·데이터센터 전력비용 등 초당적 합의 가능 분야 존재 • AI 규제는 주 정부 중심 파편화 지속 가능성
정부지원 (세출·투자)	• 신규 세출과 부채한도는 각각 **의회의 예산·입법 결정에 좌우** • 의무지출·기배정된 다년도 예산은 기존 법률상 요건에 따라 집행 • 신규 재정지원·투자사업의 규모와 추진 속도는 **의회 구도에 영향**	높음	• 예산조정안 3.0 및 국방 추가 의무지출(3,500억 달러)은 처리 가능성 낮음 • '26년 12월 11일 임시예산 만료,'27년 상반기 부채한도 대치 예상 • ACA·메디케이드 복원 논의가 예산 협상 쟁점으로 부상 가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정부지원은 미국 내 공장·생산설비 등 물리적 기반에 대한 지원과 정부 주도의 투자·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모두 포함. 2) ACA(Affordable Care Act)는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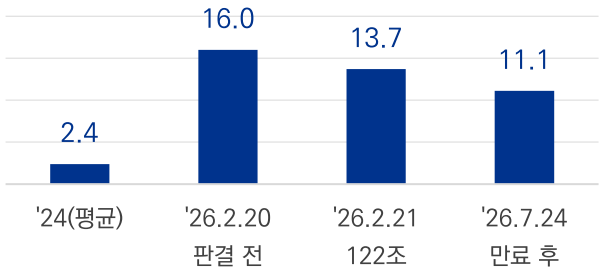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관세 >> 현상 유지 또는 통상 압력 강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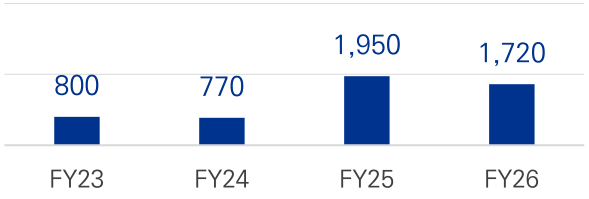
IEEPA 위법 판결 이후 관세는 통상법 개별 조항 중심으로 재편되어 시행 중. 관세의 법적 근거는 모두 대통령 권한으로 의회 구성이 바뀌더라도 관세 기본 체계는 유지될 가능성 상존. MAGA와 관세 수입 확보 등을 위해 다른 조항을 통해 통상 압력을 높일 소지가 있으나, 개별 국가별 협상을 통한 국지적 조정 가능

미국 관세 관련 주요 지표

미국 평균 실효관세율(%)[1]



미국 관세수입(억 달러)[2]



주요 미국 관세 체계 현황과 전망[3]

법적 근거	현행 대상/세율
IEEPA	• 대법원 위법 판결(2.20)로 무효 • 법원·세관 절차 통해 FY2026 중 약 1,300억 달러 환급
122조	• 판결 후 150일 한시 관세 → 2026.7.24 만료
301조	• 강제노동 관세 60개국 10~12.5% • 한국은 MFN 합산 12.5%
232조	• 철강·알루미늄 10~50% • 의약품 0~100%(한국·EU·일본 15%)
338조	• 캐나다 자동차·주류·유제품 50%, 일부 품목 수입 금지
미·중 갈등	• 부산 합의 휴전 '27.1.10까지 연장

1 관세 기본 틀 유지 전망
- 관세 법적 근거는 모두 대통령 권한
- 의회 견제 수단은 권한 제한 입법·조사·세출 조건 조정에 한정

2 통상 압력 강화 가능성
- MAGA를 표방하며 대통령 권한을 통해 지정학·통상 협상에 집중할 유인 존재
- 관세 수입 확보, 법원·의회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조항을 통해 관세 부과 가능

3 국가별 또는 품목·예외 조정 가능성 상존
- 관세를 동맹 국방비 분담과 연계하여 압박 가능
- 캐나다 사례(338조를 통해 약 200억 달러 규모 수입품 50% 관세 부과 ▶ 일부 품목 면제(10.23)와 철강·자동차 관세 인하 협상)와 같이 관세 압박과 협상을 병행한 국가별 국지적 조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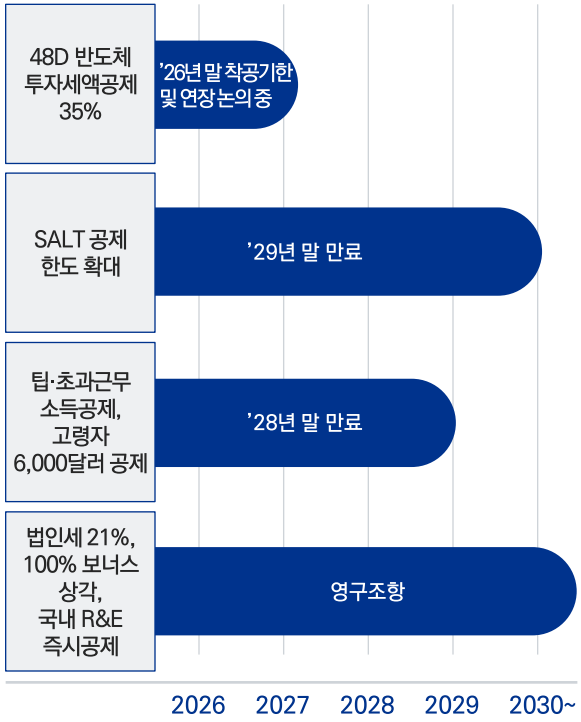
Source: 1) Yale Budget Lab(2026.2.21) "State of U.S. Tariffs: February 21, 2026" Yale Budget Lab(2026.7.24) "The State of U.S. Tariffs"
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Customs Duties
3) Holland & Knight(2026.7.30) "And the (Tariff) Beat Goes On: New Section 301 Forced-Labor Tariffs Imposed on 60 Countries", Troutman Pepper Locke(2026.9.10) "From Duties to Import Bans: President Trump Escalates Section 338 Actions Against Canadian Goods", Financial News(2026.10.27) "U.S.-Canada trade deal talks gain momentum; steel and auto tariffs could be lowered within a week", CM Trade Law(2026.9.30) "U.S.-China Trade Truce Extended Two Months: BIS Affiliates Rule Suspension Follow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세제 >> OBBBA 기본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재무부 세칙 관련 불확실성 상존

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의회 의존도가 높으나, 공화당의 추가 감세는 의회 견제로, 민주당의 증세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각각 제약되어 OBBBA 현행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재무부 공표 시행 세칙의 법적 불확실성은 상존하며, 증세·AI 과세 위험은 2029년 이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현행 OBBBA 주요 조항 시한



주요 세제 현황과 전망

구분	현행 내용/쟁점
OBBBA 영구 조항	• 법인세 21%, 100% 보너스 상각 • 국내 R&E 즉시공제
OBBBA 일몰 조항	• 팁·초과근무·고령자 공제 2028년 말 만료 • SALT 공제 확대 2029년 말 만료
OBBBA 48D 세액공제	• 35%, 2026년 말 착공기한 연장 논의 (상원 재무위 양당 지지)
OBBBA 즉시공제 허용 등에 대한 세칙	• FY2027~2028 기업 세제 혜택(약 2,324억 달러) 관련 세칙 미확정 – 설비·생산시설 즉시상각, 국내 연구개발비 즉시공제, 이자비용 공제 한도 완화 관련 적격 자산의 범위, 시점 판정, 계산 방식 등은 '26년 11~12월 규칙안 공표 전망
민주당 증세안	• 법인세 인상 논의(세율 미정) • 자사주 매입세 1% → 4%
민주당 데이터센터 세제안	• 데이터센터 소비세 신설, 100% 보너스 상각·연구세액공제 배제 검토

1 현행 OBBBA 영구 조항 중심 세제 유지 전망
- 추가 감세를 위한 예산조정법안은 민주당 의회에서 제동
- 민주당 증세안 및 예산조정은 대통령 거부권 전망

2 48D 연장 등은 초당적 지지로 레임덕 회기·예산 패키지에서 처리 가능, 일몰조항 연장은 이후 예산 협상 카드

3 재무부가 공표 예정인 OBBBA 시행 세칙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민주당 견제로 기업별 실제 혜택·적용 범위 등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및 세무조사·소송 가능성 존재

4 2029년 이후 증세 및 AI 데이터센터 과세가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

Source: Holland & Knight(2026.10.5) "Section 48D Deadline Is Near: When Construction Begins and Contiguous Property Qualifies", Alvarez & Marsal(2026) "IRS Provides Practical Roadmap for 100% Depreciation of Qualified Production Property (Notice 2026-16)", Bloomberg Intelligence(2026.10),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법인세 21%는 2017년 TCJA에서 이미 영구화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규제 >> 규제 완화 기조 가운데 주 정부·법원 중심 생활비·안보 의제 변화

규제·인허가는 행정부와 규제기관의 권한 영역이라 민주당의 단독 입법이 제한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자동차·AI·금융 등 규제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 다만 실질적 견제는 법원과 의회 조사가 담당하고, 데이터센터 전력비·약가·칩 보안 등 생활비·안보 관련 초당적 의제와 주 정부 규제는 부분적 변화가 예상

주요 산업별 행정부 및 민주당 정책 스탠스와 향후 전망

산업	현행 규제(트럼프 행정부)	민주당 정책 스탠스	전망
에너지·환경	• 시추·LNG 수출 확대, IRA 축소·해상풍력 중단, 태양광·풍력 공제 중단	• 청정에너지 공제 복원, 송전망 확충·인허가 간소화	• 현행 유지 • 인허가 개혁은 타협 여지
자동차·EV	• 연비기준 대폭 완화, EV 세액공제 종료, 차량 온실가스 기준 폐지	• EV 공제 복원, 충전 인프라 예산 재집행	• 현행 유지 • 커넥티드카 규제는 입법화 가능
제약·헬스케어	• MFN 약가 협약(26개사, 2025.12 기준)·메디케이드 확대, 행정 압박으로 약가 인하	• ACA 보조금 복원, 메디케어 약가협상 확대, PBM 개혁	• 부분 강화 • 약가 인하는 일부 법제화
빅테크·AI	• 자율·비공개 감독 기조 • 공화당 의회는 주 AI법 연방 선점 입법 추진	• 노동보호·AI 과세	• 연방정부 현행 유지 • 주 정부 중심 규제 확산 가능성
데이터센터·전력	• 인허가 간소화, 요금납부자 보호법(Ratepayer Protection Act)은 주에 비용 기준 검토 권고(하원 417-3 통과)	• 의무형 비용 부담(GRID Savings Act·FERC 규칙), 소비자 보호 강화	• 부분 강화 • 전력망 비용 부담 강화
반도체	• 일부 첨단칩 232조 관세, 중국 공장 장비 반입 개별 허가	• 대중 첨단칩 판매 비판 • Chip Security Act (초당적 지지)	• 부분 강화 • 칩 위치 확인 의무 강화
방산·조선	• FY2027 국방 1.5조 달러 요청 • 조선 협력(MASGA) 추진	• 예산조정을 통한 국방비 증액 경계 • 조선 재건 지지	• 조선 협력 유지 • 신규 사업 예산 압박
금융	• 바젤III·eSLR 완화, GENIUS 시행 등	• 사모신용 감독 강화, 자본 완화에 대한 청문회 견제	• 완화 기조 유지 • 클래티법 지연 가능성

1 현행 규제의 큰 틀은 유지
-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는 행정부·규제기관 권한으로 지속
- 민주당 단독 의제(IRA·EV 공제 복원, 포괄 AI 규제)는 거부권 등으로 입법화 제한

2 생활비·안보 의제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부분 강화 전망
- 데이터센터 전력비, 약가·PBM, 칩 보안, 인허가 개혁, 조선 협력 양당 지지
- 데이터센터 비용 부담 등 규제 강도를 둘러싼 이견 존재

3 주 정부·법원 중심의 규제 집행
- 신규 규제의 입법은 제한되고, 행정 규칙·주 정부·법원 중심으로 집행될 소지
- 민주당은 청문회·세출 조건으로 속도 조절, 실질 견제는 법원
- 대통령은 여론·가격 압박 등의 수단을 활용할 소지 존재

Source: Utility Dive(2026.9.16) "House passes ratepayer protection bill to limit data center cost shifts", CBS News(2026.9.17) "Senate Democrat blocks House-passed bill to shield Americans from data center energy costs, proposing alternate measure", Broadband Breakfast(2026.10.15) "Midterms Could Change the Politics of AI", JPMorgan Private Bank(2026.10.19) "The Midterms can change spending, but not America's fiscal path",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RPA(Ratepayer Protection Act)는 요금납부자 보호법, FERC(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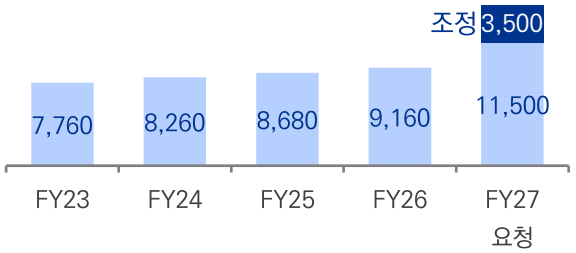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정부지원 >> 확장 재정 제동… 12.11 임시예산과 부채한도가 분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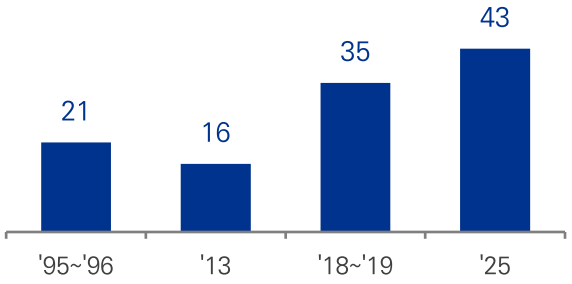
신규 재량지출은 매년 세출법으로 결정되어 민주당 의회의 영향력이 높아, 국방 예산조정분(3,500억 달러)과 추가 감세는 제약될 소지가 있음. 반면 의무지출과 IIJA·CHIPS 등 기 배정된 다년도 예산은 기존 법에 따라 집행되며, 12.11 임시예산 만료와 2027년 부채한도가 주요 이벤트 위험으로 부각

국방예산 규모 및 역대 장기 셧다운 기간

국방 지출·예산(억 달러)[1]



역대 장기 셧다운 기간(일)[2]



미국 정부 지출 관련 현황·쟁점 및 전망[3]

구분	현황·쟁점
국방 예산	• FY2027 요청 1.5조 달러 중 예산조정분(3,500억 달러) – 예산조정분에는 골든돔(171억 달러), 자율전(546억 달러), 패트리엇(108억 달러), F-35(67억 달러) 등 포함
이란 전쟁 추경 별도 요청	• 이란 전쟁 등 추경 876억 달러 요청(국방부 670억 달러, 탄약 210억 달러 포함)
비국방 재량	• 행정부 10% 삭감 요청(7,330억→6,600억) • 현 하원안은 2% 삭감
의료 지원	• 메디케이드 삭감(10년 9,110억 달러) 유지 및 ACA 세액공제 만료
집행권	• 포켓 리세션은 8.1억 달러 규모로 GAO의 위법 판단을 근거로 민주당 견제
일정	• '26.12.11 임시예산 만료 • '27년 봄 부채한도 도달 이후 X-date는 '27년 중후반 도래 전망

1 정부지원 추가 확장 제동, 기존 재정은 유지
- 국방 예산조정·추가 감세는 제한될 소지
- 의무지출·기존 다년도 예산은 집행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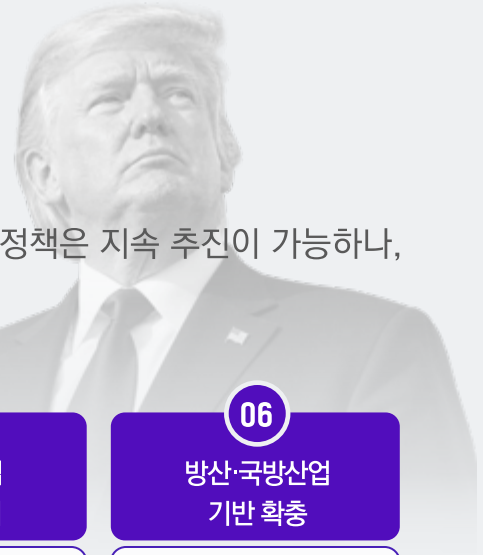
2 '26년 12월 셧다운 및 부채한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 등 리스크 확대
- 본예산은 '27년 봄으로 지연 가능
- 부채한도 41.1조 대비 여력 약 1조 달러로 '27년 봄 세금 환급 시즌 도달
- '27년 중후반 X-date 도래 가능성에 따른 이벤트 위험 확대

3 협상형 타결 가능성
- 셧다운 시, 민주당의 책임론이 부각됨에 따라 협상 유인 공존
- 의료 지원 복원(ACA·메디케이드 복원 시 2년 약 1,300억 달러 재원 소요 전망) 대신 국방 증액 수용도 가능

Source: 1)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 2) CRFB(2026.1.26) "Government Shutdowns Q&A: Everything You Should Know". 3) cut to non-defense discretionary spending", CBS News(2026.6.24) "Trump administration asks Congress for $88 billion in supplemental funding for Iran war, Ebola, farm aid", American Action Forum(2026.9.29) "The $810 Million Pocket Rescissions Request: What It Would Cut and Why Its Timing Matters", CRFB(2026.11.3) "Lame Duck Session Shouldn't Be an Excuse to Borrow More", Fiscal Lab on Capitol Hill(2026.6) "Budget Policy Deadline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참고] 2027 트럼프 주요 추진 정책 속도 변화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속도에도 변화가 예상됨. 행정명령 기반 정책은 지속 추진이 가능하나, 세제·예산 등 의회 협력이 필요한 입법 기반 정책은 추진 속도, 범위, 실현 가능성에서 제약을 받을 전망

01 감세 및 기업 투자 지원	02 연방 규제 및 인허가 완화	03 America First 통상 정책	04 에너지 패권 확대	05 AI·첨단산업 주도권 확대	06 방산·국방산업 기반 확충
• 소득세 감면 등 기존 감세 기조 유지 • 기업의 설비·공장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 미국 내 생산·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보완	• 기업 활동·투자 관련 연방 규제 완화 • 환경·에너지·인프라·제조업 등 연방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규제 부담 완화로 기업 투자 및 신규 사업 촉진	• 상호주의 기반 무역 정책으로 미국산 제품 경쟁력 제고 • 대중국 수입규제 강화 및 디커플링 지속 • 비관세장벽 및 우회수입 대응 강화로 미국 산업 보호	• 석유·천연가스 생산 및 LNG 수출 확대 • 원전·SMR 등 안정적 전력원 확충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 에너지 개발 관련 규제·인허가 완화	•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AI 인프라 구축 • 반도체 등 첨단 제조 공정의 미국 내 내재화 가속 • 관련 규제 완화, 민간투자 촉진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 미군 무기체계 현대화 및 방산 생산력 증대 • 해군 함정 건조 및 미국 내 조선업 인프라 강화 • 핵심 방산 소재의 동맹국 연대 공급망 안정화

행정부 주도 정책의 지속성

✓ 관세 부과, 연방 규제·인허가 등 의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책은 대통령 및 행정부 권한을 통해 기존 추진 기조가 상당 부분 지속

의회 의존 정책의 불확실성

✓ 세제 개편, 예산 및 정부 투자·재정지원 관련 정책은 의회 구도로 인해 추진 범위와 속도에 제약이 예상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참고] 2026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연말 의회 처리 사안 및 일정

연말 의회 처리는 대규모 패키지, 임시예산 연장, 혼합형의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뉘며, 시나리오에 따라 2027년 새 의회로 이월되는 쟁점의 규모와 분야별 영향이 달라질 전망

연말 처리 핵심 구간

2026 레임덕 구간(현 의회) → **2027 새 의회 구간**

11월 선거 직후	11~12월	12월 11일 전	연말	2027.1.3	1.12 ~ 2.1	2027 봄~10.1
새 지도부 구성, 레임덕 회기 개시	세법·인허가 ·국방수권법	예산·사업 연장 합의 여부	부채한도 선제 처리 여부	새 의회 임기 시작	USMCA 의견수렴 마감 FY2028 예산안 제출 기한	예산·세법 심의 → FY2028 개시

연말 의회 처리 이후 3가지 시나리오

1 대규모 패키지
- 정식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연내 일괄 처리
- 합의 범위에 따라 주요 정책 쟁점 일부 타결
- 미합의 쟁점은 차기 의회에서 추가 논의

2 임시예산 연장
- 정식 예산 합의 지연, '27년 초까지 임시예산 연장
- 신규 사업 및 주요 법안 처리가 차기 의회로 이월
- 정부 운영은 유지되나 신규 정책 추진은 제한

3 혼합형
- 일부 부처 예산 확정, 나머지는 임시예산 운영
- 분야별 예산 확정 시점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 차이
- 미합의 예산·정책 쟁점은 후속 협상으로 순차 처리

분야별 주요 쟁점 연말 의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정책 변수

감세·기업 투자지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이자비용 공제, 에너지 세액공제가 연말 세법 패키지에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규제·인허가	환경심사 기간, 소송 절차, 이미 승인된 사업의 안정성, 송전망 입지 계획이 바뀌는지 확인 필요
에너지·AI 인프라	송전망 확충 여부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로 늘어나는 송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관건
국방산업	조선·탄약, 공급망, AI·사이버, 반도체·핵심광물, 조달 개혁의 국방수권법 반영 여부 확인 필요
인프라·농업	교통사업 연장과 재원, 수자원 사업, 농업법, 만료 예정 권한의 연장 여부 확인 필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2월 11일, 연말 부채한도, 봄~여름 심의는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조건부 일정이며 개별 표결일도 미정임. 1월 3일 실제 개회일은 법률로 조정될 수 있고, 1월 12일은 USMCA 의견수렴 마감일로 관세 발효일이 아님. 2월 1일은 법정 기한이라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Ⅰ.	2026 미국 중간선거 Overview	1
Ⅱ.	의회 권력구도 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 향방	5
Ⅲ.	**국내 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15**
Ⅳ.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및 시사점	24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중간선거 이후 미국 재정 여건 등에 대한 전망

블루웨이브는 미국의 추가 감세·재정 확대를 제약해 적자 확대 위험을 줄이나, 기존 재정적자를 근원적으로 축소시키지는 못함. 재정 측면의 금리 하방 요인은 규모가 작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미 장기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이며, 관세·예산·세칙 관련 이벤트는 '27년 상반기에 집중될 전망

블루웨이브에 따른 미국 재정/금리 여건 및 정책 리스크

재정

추가적 확대 기조는 제한되나, 근원적인 재정적자 구조 해소는 역부족

- '27년 이후의 추가 감세·국방 증액 등 정당 단독 재정 확대는 제한될 소지
- 국방 증액 요청(3,500억 달러)도 GDP 대비 0.3% 내외의 일시적 지출 증가로 적자 경로를 바꾸기 어려움
- 의무지출 증가세·부채 누적 및 이자비용 급증 등으로 재정적자는 GDP 대비 5.8%('26년)에서 6.7%('36년)로 확대 전망(CBO)
- 민주당 단독의 재정 건전화 입법은 제한적

금리

금리 인상 국면으로 하방 요인은 적으며, 금리 하락 폭은 제한

- 현재 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79.2%로 높은 수준 (Fedwatch '26.11.4 기준)
- 미 10년물이 9월 5%를 돌파한 가운데 고유가(9월 배럴당 100달러 상회)로 물가 부담 지속
- 재정적자, AI 투자 관련 회사채 발행 등이 장기물 금리에 상방압력으로 작용, 재무부의 단기채 중심 발행으로 장기물 공급 부담은 완화되나 차환 부담은 확대

정책

관세·예산·세칙 관련 리스크는 '27년 상반기에 집중

- 예산: 새 의회와 FY2027 본예산 협상에서 이란 전쟁 추경 및 국방비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셧다운 위험 존재. 부채한도는 '27년 상반기 도달 및 X-date는 '27년 중후반 전망
- 관세: 행정부의 통상 수단 의존 확대 가능성, 301조 관세 적법성 소송 및 미·중 무역 휴전 만료('27.1.10)
- 세칙: PFE 규정을 비롯한 OBBBA 시행 세칙이 '27년에 걸쳐 단계적 확정 전망

레임덕 회기 — '26.11~'27.1.2

- '26.12.11 임시예산 만료. 셧다운을 비롯해 단기 연장으로 새 의회 이월 가능성 존재
- '27.1.3 제120대 의회 개원

→

리스크 집중 — '27년 상반기

- 미·중 무역 휴전 만료, FY2027 잔여 본예산 협상 및 전쟁 추경 등 논의, 대통령의 FY2028 예산안 제출, 부채한도 X-date 도래 가능성 등이 겹치며 위험회피 성향 확대 가능

→

기준선 회귀 — '27년 하반기 이후

- 부채한도 X-date 전후 협상 대치가 재연되나, 시한 직전 타결될 소지가 높음
- 장기금리는 연준 통화정책 기조와 국제유가, 재무부의 국채 발행 전략(단기채 확대·장기채 바이백)에 좌우. 특히, 재무부 현금잔고 재확충을 위한 대규모 단기채 발행 시 유동성 흡수 가능

Source: CBO(2026.2.11)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6 to 2036", CRFB(2026.11.3) "Lame Duck Session Shouldn't Be an Excuse to Borrow More", Brown Brothers Harriman(2026.10.1) "How might the 2026 US midterms influence financial markets?", Fiscal Lab on Capitol Hill(2026.6) "Budget Policy Deadlines", 언론 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중간선거 결과 등이 한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경제의 방향은 반도체 호황의 파급효과와 글로벌 유가·금리에 크게 좌우될 전망. 블루웨이브는 2027년 상반기 국내외 리스크를 키울 수 있음. 반도체 호조가 성장을 견인하겠으나, 관세와 OBBBA 시행세칙에 따라 업종·기업 간 차별화는 확대될 전망

블루웨이브 이후 한국경제 영향

경로	변수	현황	향후 전망
금융	원달러 환율	▪ 1,337.7원('26.10.28)으로 고점('26.7.2) 대비 약 15% 절상 ▪ 경상수지 흑자 및 수출기업 달러 매도가 원화 강세 지지	▪ 경상흑자 기반 현재 수준의 강세 기조 유지. 반도체·자동차의 환산 이익을 줄이고 항공·철강 등 수입 원재료 원가 부담 완화 ▪ '27년 미국 정책 이벤트·연준 추가 인상 시 일시 약세 압력
	금리	▪ 한국은행 '26년 7~8월 2차례 연속 금리 인상 후 10월 3.00% 동결·추가 인상 기조 ▪ 외국인 수요와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로 한국 장기채 금리는 10월 4%대	▪ 한은 긴축 기조와 높은 미 장기금리로 한국 금리 하락 폭 제한 ▪ '27년 상반기 등 위험회피 국면에서 원화 약세·외국인 채권 이탈을 동반하면 상승 압력
실물	성장 및 물가	▪ 한은, 8월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26년 2.6%→3.3%, '27년 2.1%→2.9%)에 이어 10월 추가 상향 가능성 시사 ▪ '26년 9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8%로 8월(3.4%)에서 둔화되었으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를 여전히 상회	▪ 반도체 중심 수출과 파급효과로 경제성장 호조세 ▪ 고유가, 재정 확장, 반도체기업 중심 성과급 등 지출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 지속
	수출	▪ '26년 1~9월 누적수출액 8,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및 무역수지 2,525억 달러 흑자 ▪ 동 기간 반도체 수출은 3,403억 달러(전체 대비 41.8%) ▪ IEEPA 관세 위헌 판결(2026.2.20) 이후 301조 강제노동 관세(한국 MFN 포함 12.5%)로 대체, 자동차·철강 등은 232조 관세 유지	▪ 관세 부담은 유지되나,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 호조 지속 전망 ▪ 301조 관세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 OBBBA 세칙에 따른 대미 소재·부품 공급망 재편으로 기업 간 차별화 ▪ PFE 세칙(원가 비중 요건, 실효적 지배·라이선스 기준, 환수 규정)의 확정 결과에 따라 배터리·태양광 미국 현지법인의 세액공제 수혜가 기업별로 차별화

주요 리스크 요인

셧다운 장기화·X-date 도달
- 미국 성장 둔화, 미 국채 신뢰 훼손 시 금리 상승·원화 약세로 금융·실물 부담 동시 확대

유가 재급등·확전
- 물가·금리 상방, 교역조건 악화, 한은 추가 인상 압력 확대

연준 추가 인상 가속
- 원화 강세 기조 약화, 국고채 금리 상방

AI 투자 둔화
- 경상수지 흑자·성과급 소비·법인세수 감소 등으로 연결 시, 시차를 두고 한국에 부정적 영향
- 특히, 민주당 중심 AI 책임·감사 강화 기조,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인프라 확보 비용과 인허가 기간 확대, AI 투자에 대한 자본 병목 등은 AI 설비투자 속도 제약 가능

Source: 산업통상부(2026.10.1)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 한국은행(2026.10.22) 통화정책방향 결정(기준금리 3.00% 동결), 언론 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정책 추진 여건 변화와 국내 산업 영향

2026 중간선거 결과

집권당	상원	하원
Ⓡ	Ⓓ	Ⓓ

상·하원 다수당 교체 및
의회 권력구도 재편

4대 정책 환경의 의회 의존도 및 추진 여건

관세	세제	규제	정부지원
대통령 권한 중심의 **기존 관세체계는 유지**될 전망이며, America First 기조 아래 **통상 압력 강화 가능성** 상존	OBBBA 중심의 **현행 감세체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시행 세칙 및 세액공제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 지속**	행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 기조는 지속**되나, 생활비·안보 및 주 정부 중심 **부분적 규제 강화 가능**	기배정된 투자·지원은 지속되나 **신규 재정지원은 제약**, 예산 협상에 따라 **신규 투자 규모·속도 불확실성 확대**

국내 주요 산업별 영향

반도체

- 반도체 관세·대중 수출 통제 지속으로 대미 수출 부담 및 현지 생산 압력 확대
- 세제·지원 불확실성으로 투자 부담이 커지나, AI·첨단산업 투자 기회는 확대

자동차

- USMCA 노동·원산지 요건 강화 가능성으로 멕시코 생산 부담 확대
- 45X·FEOC/PFE 규제 수위가 배터리 조달 여건의 주요 변수로 부상

철강

- 232조 고율 관세와 미국산 우선 기조로 대미 수출 부담·현지화 압력 지속
- LNG·원전·송전망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 철강 수요는 기회 요인

에너지

- 의회 견제 확대 시 화석연료 추가 지원 및 투자 제약, 현지화 압박 지속
- 재생에너지 세제·인허가 재논의로 태양광·풍력·ESS 투자기회 확대 가능

조선

- 대중 견제·해군력 강화의 초당적 기조로 발주 확대 및 MRO 수혜 지속
- 미국 내 건조 원칙과 재정지원 불확실성으로 현지 투자 회수·사업 속도는 제약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반도체산업 >> 관세 및 세제 불확실성 증대 · 중간선거 이후 향방 예의주시

반도체 관세 유지와 대중 수출 통제, 세제·지원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대미 수출 부담과 현지 생산·공급망 재편 압력이 확대될 전망임. 한편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수요와 투자 기회가 커지는 만큼, 미국 기업과의 공동개발·JV 등 현지 파트너십 확보가 핵심 대응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정책 리스크 및 불확실성

반도체 관세 유지 및 대중 수출 통제

대미 수출·현지 생산 부담 확대

- 반도체 관세 유지와 America First 기조로 미국 수출의 가격·통상 부담 증가
- 반도체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 및 공급망 재편 필요성 확대 전망
- 대중 수출 통제로 공급망 재편 및 중국 시장 접근 제한

세제·지원 변수

투자비 부담 및 불확실성 증가

- 투자세액공제 연장 불확실성으로 미국 투자 부담 강화
- 관세·규제 및 정책 변동성으로 투자비 회수기간, 투자 시점 판단의 불확실성 증가
- 추가 감세·공제 추진 속도 제약, 추가 예산 협상 불확실성 확대

기회 요인 및 수혜 전망

AI·첨단 주도권 강화

미국 첨단산업 투자 기회 확대

- AI·첨단산업 주도권 강화와 투자 세제지원으로 미국 내 AI·반도체 분야 대상 투자 기회 발생 가능
- AI 인프라 투자로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R&D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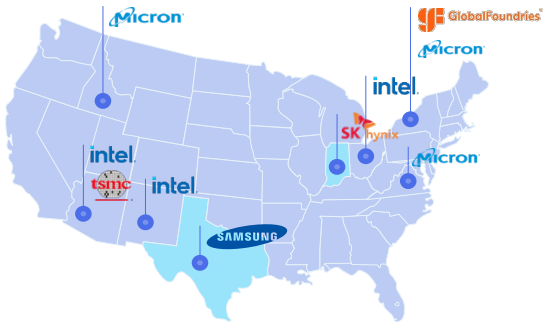
미국 기업 중심 산업 생태계 강화

현지 파트너십 확대

- 미국 기업 중심의 기술·조달·투자 생태계가 강화되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고객·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중요성 확대
- 현지 생산·R&D 투자 등을 통한 협력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동맹국과 AI·반도체 기술 협력 확대, 미국 기업과의 공동개발·JV 등 현지 파트너십 확보 중요성 커질 전망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대미 투자 현황]



[주요 아시아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

기업	국가	주요 지역	CHIPS 직접 보조금
TSMC	대만	애리조나	최대 66억 달러
삼성전자	한국	텍사스	최대 47.45억 달러
SK 하이닉스	한국	인디애나	최대 4.58억 달러

Source: 미국 상무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자동차산업 >> 멕시코 생산 부담 확대 · 배터리 규제 수위가 변수

USMCA 이행법 개정 요구가 재부상할 경우,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은 인건비 상승 및 노조 문제에 따른 공장 제재 리스크에 노출될 전망. 한편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45X)는 축소 기조가 이미 굳어진 가운데, 우려외국기업(FEOC/PFE) 규제 수위에 따라 공급망 재편 압박과 배터리 조달 단가 안정화 가능성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

정책 리스크 및 불확실성

USMCA 이행법 개정 요구

멕시코 생산 부담 확대

- 민주당의 USMCA 이행 관련 개정 요구가 재부상할 경우, 자동차 노동가치비율(시급 16달러 이상 지역 생산 40~45%) 및 역내가치비율 기준 강화 가능성 상존
- 북미 최저임금제 도입, 신속대응 노동 메커니즘 강화로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은 인건비 상승 및 노조·공장 제재 리스크에 노출됨

관세 부과 및 세제·지원 축소

완성차·부품 부담 지속

- 완성차·자동차 부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고, 미국산 외 수입 완성차·부품에 대한 견제 지속
- USMCA[1] 적격 부품은 232조[2] 자동차 관세가 면제되나, 적격 완성차는 비미국산 가치분 25% 부과 유지
- EV 세액공제(30D, 45W) 및 충전 인프라 세액공제 종료, 45X 축소 확정에 더해 PFE 규제 강화 시 중국계 광물·소재 배제에 따른 원가 부담 및 재편 압박 불가피

기회 요인 및 수혜 전망

배터리 세액공제(45X) 및 우려외국기업 요건 조정

배터리 조달 단가 안정화 여지

- 세부적인 우려외국기업(FEOC/PFE[3]) 요건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의 수정 의견 개진 및 로비 여지 존재함
- 규제 수위 완화 시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는 배터리 조달 단가 안정화 측면에서 긍정적 전망임

연방 환경규제 완화 및 주(State)별 지원

내연기관 생산 부담 완화 및 판매 기반 유지

- 2009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철회 및 승용·중형·대형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폐지 등 연방 환경·연비 규제 완화로 내연기관 등 생산 부담 완화됨
- 주 정부 차원의 기업·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판매 기반 유지 기회 포착 가능함
- 친환경 차량 세액공제 일부 복원 논의 여지 및 주(State)별 자체 인센티브 내용 변동 가능성 상존함

Source: 미국 의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1: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Note2: 무역확장법 제232조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부가 판단 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나 수입제한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 Note3: PFE는 Prohibited Foreign Entity(금지외국법인)로 바이든 정부 때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와 동일한 의미

[멕시코 내 주요 자동차 관련 한국 기업]

분야	기업 명
완성차	기아(K3·K4·현대 투싼)
현대차 그룹 계열 부품사	현대트랜시스(파워트레인)
	현대모비스(모듈공장)
	현대위아(엔진)
독립 1차 협력사	한온시스템(공조)
	포스코인터내셔널(구동모터코어)
	LG이노텍(차량용 전장)

Source: 각 사 홈페이지, KOTRA,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우려외국기업 의견 방향에 따른 시나리오]

- **강화** → 자동차 기업의 중국계 공급망 정리 압박 심화
- **완화** → LFP 조달이 보다 용이, 배터리 조달 원가 측면 다소 긍정적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철강산업 >> 고율 관세 및 현지화 압력 지속·인프라 수요는 선택적 기회 요인

고율 관세와 규제·인허가 완화가 지속되면서, 미국 철강시장은 수입 억제와 자국 생산 확대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 국내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부담과 현지화 압력이 가중되는 한편, LNG·원전 및 송전망 확충에 따른 강관·후판·전기강판 등 에너지 인프라용 철강 수요가 현지 생산·조달 기반을 갖춘 기업 중심의 선택적 성장 기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정책 리스크 및 불확실성

232조 고율 관세 지속

대미 수출여건 및 채산성 악화

- 232조 고율 관세·파생제품 적용과 미국산 철강 사용 유도 지속
- 한국산 철강·파생제품의 가격 경쟁력 및 수출채산성 저하, 기계·설비 등 관세 대상 파생제품으로 부담 확산
- 제품분류·금속 구성·원산지 입증에 따른 통관관리 부담 증가

미국 중심 생산·공급망 재편

현지화 압력 가중

- 관세 보호와 규제·인허가 완화로 미국 내 생산·투자 여건 개선
- 현지 공급 확대 가능성에 따라 한국산 수입 철강의 경쟁부담 심화
- 현지 생산·가공 및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공급협력 필요성 증대

기회 요인 및 수혜 전망

LNG·원전 프로젝트 확대

강관·후판·배관재 수요 증가

- 에너지 패권 확대 기조에 따라 LNG·원전용 강관 및 후판 수요 기반 확대 가능
- 배관재 수요도 함께 증가하며, 에너지 인프라용 고부가 철강이 선택적 성장 기회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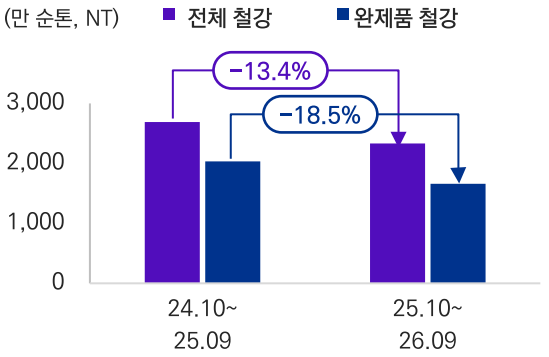
송전망 확충

전기강판·구조용 강재 수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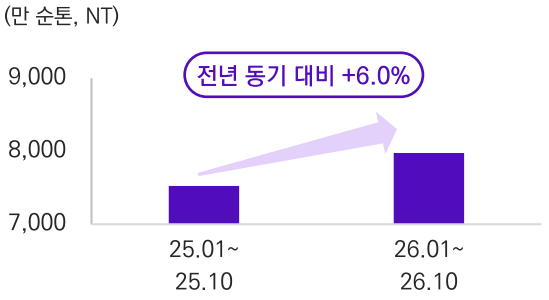
- 전력망·송전망 확충 프로젝트 추진으로 전기강판·구조용 강재 수요 기반 확대
- 다만 정책 수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보다, 미국 내 자체 생산·조달 역량을 확보한 기업 중심의 선택적 수혜 전망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미국 철강 수입량]



[미국 누적 조강 생산량, 26.10.31 기준]



Source: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에너지산업 >> 화석연료 지원 제약 · 재생에너지 여건 개선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양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화석연료 추가 지원과 인허가 입법 추진은 제약을 받는 반면,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복원과 인허가 제한 완화 논의는 확대될 전망임. 다만 현지화 압박은 지속되어 국내 기업은 발전원별로 차별적인 사업 환경에 놓일 것으로 예상됨

정책 리스크 및 불확실성

화석연료 추가 지원 제약

발전설비 수주 불확실성 확대

- 석탄발전 추가 지원예산 확보가 제약되면서 발전설비 투자 및 국내 기업의 관련 기자재 수주 확대에 부담
- LNG 수출 및 석유·가스 개발 확대 정책에 대한 의회 견제가 강화되며 국내 기업의 관련 설비 신규 수주 불확실성 확대
- 화석연료 신규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의회 견제 상존

현지화 요건 및 인허가 입법 변화

현지화 압박 지속 및 입법 추진력 약화

- 미국산 소재·핵심 부품 조달 요건 강화와 함께 밸류체인 전반의 현지화 압박 지속
- NEPA[1]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정 철회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SPEED Act[2] 등 주요 입법 드라이브의 추진력 약화 불가피

기회 요인 및 수혜 전망

인허가 제한 완화 및 신속화

프로젝트 개발 여건 개선

- 신규 해상풍력 부지 임대 중단 및 재생에너지 인허가 심사 강화에 대한 의회 견제 확대
- 인허가 제한이 완화되면 프로젝트 착수 및 설비 발주 여건이 개선되어 국내 재생에너지 기자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 전통 화석연료 부문은 환경규제 완화 및 개발 프로젝트 인허가 신속화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복원 논의

재생에너지 투자 여건 개선

- 민주당의 태양광·풍력 세액공제 복원 추진으로 기존 지원 축소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 확대
- 세액공제 조기 종료 일정 및 착공요건이 완화되면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경제성이 개선되고, 연계 ESS 투자 및 국내 기자재 공급 기회 확대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1: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는 미국 국가환경정책법
Note2: SPEED Act(Standardizing Permitting and Expediting Economic Development Act)는 NEPA 환경심사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신속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정책 변화에 따른 美 에너지 산업별 영향]

태양광	세제·인허가 변화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 투자 여건 개선 가능
풍력	임대·인허가 제한 완화 여부에 따라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 존재
화석연료	추가 지원은 제약 가능, LNG·가스 개발 기조는 지속 전망
BESS[1]	재생에너지·전력망 투자와 연계된 수요 확대 가능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1: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는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조선산업 >> 한미 조선협력 확대 기대 · 현지 건조 원칙은 제약 요인

의회 협상력이 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중국 견제와 해군력 강화 기조는 초당적으로 유지되어, 함정·상선 발주 확대와 우방국 조선사로의 수요 이동은 지속될 전망. 다만 미국 내 건조 원칙과 의회 의존도 높은 재정·인센티브·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한국 조선사는 현지 거점 기반 MRO·파트너십 중심의 선택적 수혜와 투자 회수 지연 가능성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

정책 리스크 및 불확실성

조선소 투자/생산능력 확대

현지 투자 회수 지연 가능성

- 현지 규제 완화에 구조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입법까지 지연되면서, 미국 내 야드 투입 자금의 회수 시점이 계획보다 늦어질 우려 커짐
- 미국 내 건조 원칙 고수로 국내 도크 직수출은 제약됨

의회 협상력 변화

CAPEX 및 재정 지원 추진 불확실성

- CAPEX·재정 지원 승인권을 쥔 의회의 협상력이 민주당 쪽으로 이동하며, 행정부 주도 프로젝트의 추진·집행 일정 변동 우려가 상존
- 세부 지원·실행 예산은 의회 심의·삭감 협의 과정에서 조정 여지 있으며, 민간 투자 인센티브 지연으로 군수·상선 간 사업 속도 차별화 이루어질 전망
- 투자 패키지(MASGA)의 근거인 관세 협상은 의회의 관세 권한 환수 움직임으로 불확실성 상존

기회 요인 및 수혜 전망

미국 조선·해군력 강화

발주 확대 기조 속 수혜 지속

- 함정·상선 발주 확대 기조 자체는 초당적 지지를 확보함
- SHIPS Act 등 핵심 지원 법안의 입법이 구체화되면, 현지 거점을 선제 확보한 한국 주요 조선사 중심으로 정책 수혜 집중 가능성 있음
- 현지 인수 야드 거점 군함 MRO 사업 수행 및 현지 파트너십 확대 중심으로 수혜가 가시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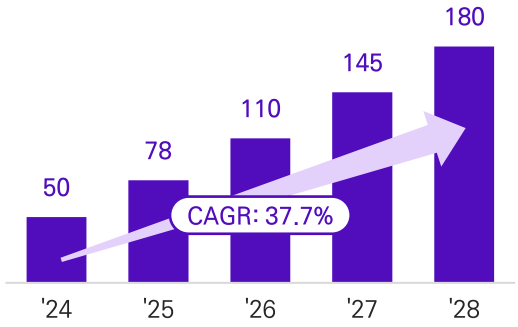
미국 내 공급망 내재화 및 대중 견제

우방국 조선사로의 수요 이동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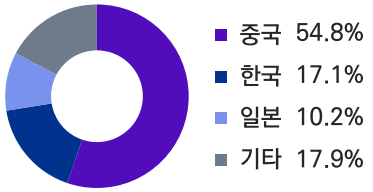
- 대중 견제는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사안으로, 의회 구도 변화와 무관하게 정책 기조 유지 가능성 높음
- 이에 따라 우방국 조선사로의 수요 이동(반사이익) 기조 지속 전망
- 함정 발주 등 군수 중심 수요가 이어지며 우방국 조선사 대상 협력 기회 지속 가능성 있음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미국 조선산업 투자 규모 전망]



[글로벌 선박 건조 점유율]



중국 조선업 점유율 확대에 따른 미국의 견제 강화

Source: 미국 해사협의회(AMC),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Ⅰ.	2026 미국 중간선거 Overview	1
Ⅱ.	의회 권력구도 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 향방	5
Ⅲ.	국내 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15
Ⅳ.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및 시사점**	**24**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블루웨이브 이후 미국 정책 환경과 한국 경제 영향

미국 정책 환경의 변화: B.L.U.E

B
Budget Limit

재정 확대 제한

추가 감세·국방 증액은 제한되나 근원적 재정적자 구조 해소는 역부족

L
Limited Rate Relief

금리 하락 폭 제한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재정적자·AI 투자 등으로 금리 하락 폭은 제한

U
Unresolved Risk

관세·예산·세칙

관세·예산·세제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지속

E
Event Window

'27년 상반기 집중

주요 정치·정책 이벤트가 '27년 상반기에 집중되며 불확실성 확대

한국 경제 및 산업 영향: W.A.V.E

W
Won Volatility

원화 변동성

경상흑자 기반 원화 강세 기조 속, 미국 정책 이벤트·연준 금리 인상 시 일시적 약세 압력

A
AI Cycle

AI 투자 사이클

AI 설비투자가 반도체 수출·경상흑자·소비를 견인하나, 투자 둔화와 AI 규제 강화가 최대 하방 리스크

V
Value of Export

수출 호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국내 성장세를 견인

E
Edge Divergence

업종·기업 차별화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업종·기업별 영향은 차별화될 전망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국내 산업의 영향

산업	이슈 및 국내 영향	한국기업의 대응 방안
반도체	• 관세·대중 수출 통제 지속으로 대미 수출 부담 및 미국 내 생산 압력 확대 • 세제·보조금 불확실성에도 AI·첨단 반도체 중심의 성장 기회 지속	• 관세·보조금 등 정책 시나리오별 미국 내 생산 비중 및 투자 시점 조정 • 현지 빅테크·반도체 기업과 공동개발을 확대하고, JV·장기공급계약을 통한 고객 기반 강화
자동차	• 노동·원산지 요건 강화 시 멕시코 생산비용 및 운영 부담 증가 • 우려외국기업 규제 수위에 따라 공급망 재편 압박과 배터리 조달 단가 안정화 여지 공존	• 멕시코 생산 거점의 노동·원산지 요건 대응 및 비용·수익성 재점검 • 배터리 핵심 소재의 공급국 다변화 및 북미 내 소재·부품 조달 비중 확대
철강	• 고율 관세 지속으로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관세 부담 증가,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 등 현지화 압력 확대 • LNG·원전·송전망 투자 확대로 고부가 철강 수요 증가 기대	• 미국 내 생산·가공 역량 확보 및 현지 기업과 공급 협력 강화 • 송전망·원전·LNG 프로젝트 대상 고부가 강재 공급 확대 및 현지 EPC 기업과의 수주 협력 강화
에너지	• 화석연료 추가 지원 제약으로 관련 투자 및 신규 수주 불확실성 확대 • 현지화 압박 속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여건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 확대	• 정책 변화에 따른 발전원별 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성 재평가 • 태양광·풍력·ESS 신규 사업 선제 확보 및 미국산 조달 요건 대응
조선	• 해군력 강화 및 대중 견제로 발주 확대 및 현지 거점 기반 MRO 사업 기회 확대 • 현지 건조 원칙과 재정지원 불확실성으로 투자 회수 부담 상존	• 미국 현지 조선소 기반의 생산·정비 등 사업 수행 역량 강화 • 미 해군 함정 MRO 참여 및 현지 조선업체와의 파트너십 확대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 KPMG

Business Contacts

금융산업

김민규 부대표, Industry Leader
mingyukim@kr.kpmg.com

신재준 부대표
jaejunshin@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한상일 부대표, Industry Leader
sangilhan@kr.kpmg.com

박관종 전무
kwanjongpark@kr.kpmg.com

테크·미디어·통신산업

강인혜 부대표, Industry Leader
ikang@kr.kpmg.com

오헌창 부대표
heonchangoh@kr.kpmg.com

민성진 전무
smin@kr.kpmg.com

제조·공공·인프라산업

황재남 부대표, Industry Leader
jaenamhwang@kr.kpmg.com

신동준 부대표
dongjunshin@kr.kpmg.com

제조·에너지산업

노상호 부대표, Industry Leader
sanghoroh@kr.kpmg.com

김성배 부대표
sungbaekim@kr.kpmg.com

삼정 KPMG

Author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hyojunglee@kr.kpmg.com

김규림
상무
gyulimkim@kr.kpmg.com

박도휘
이사
dohwipark@kr.kpmg.com

김나래
수석연구원
nkim15@kr.kpmg.com

김수경
수석연구원
sookyungkim@kr.kpmg.com

엄이슬
책임연구원
yeom@kr.kpmg.com

최창환
책임연구원
changhwanchoi@kr.kpmg.com

정미주
책임연구원
mijujung@kr.kpmg.com

류승희
책임연구원
seungheeryu@kr.kpmg.com

전혜린
책임연구원
haerinjeon@kr.kpmg.com

home.kpmg/kr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